

입장료 폐지, 다음은 관람료? 사찰수입 30%이상 감소 예상

- 1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의 앞과 뒤
- 2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립공원 입장료는 관리비(?)

국립공원은 자연환경 보존 가치가 뛰어나고 국민의 휴식처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국민들의 자산이다.

매년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인근의 국립공원을 찾아 몸과 마음을 쉰다. 또 고승대덕들이 배출된 많은 고찰(古刹)들이 국립공원에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립공원은 '관리비' 명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자연공원법에 명시돼 있다.

자연공원법 제5장 37조 1항에는 '공원 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5월 속리산 국립공원부터 도입된 이후 1987년부터는 전국 18개 국립공원 188개 매표소에서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론이 왜 계속 제기 됐을까?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이 이미 국민휴양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국민시설'에 맞지 않는 적용이라는 것이다.

또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가 합동징수 되는 것도 입장료 폐지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관련 당사자들 모두 '폐지 원칙' 합의

암묵적으로 '폐지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조계종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교감을 주고 받아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지난해 11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의견을 전달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관 스님은 11월 30일 이재웅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출입할 때 입장료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1월 10일 환경부 이재웅 장관 업무 보고를 통해 7월부터 부산반도·태안해안·다도해·한려해상 등 4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는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계획 단계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에 대한 해당 부처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13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21개 사찰과 9개 도(군)립공원에 위치한 9개 사찰이 소속된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조계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현재 입장료와 합동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받는 문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폐지방침'을 전달받기도 했다. 또 12월 16일 지관 스님을 찾아온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입장료 폐지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폐지 원칙에 합의를 이룬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2000년대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2000년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흥사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 '부당 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신흥사에 대해서는 통합징수 합당 판결을 내렸고 천은사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문화연대 역시 "국립공원만을 관리할지 사찰을 둘러볼지의 여부는 시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문화재 관람의 의지가 없는 일반 등산객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를 촉구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유럽의 모든 나라와 일본, 뉴질랜드 등의 적지 않은 국가들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재정감사 감사 주지 장곡 스님은 "문화재 관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약제가 되고 있다"며 "감사도 매년 10%이상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폐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을 표했다.

1월 18일 조계종 관람료사찰 전체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 역시 대체적으로 폐지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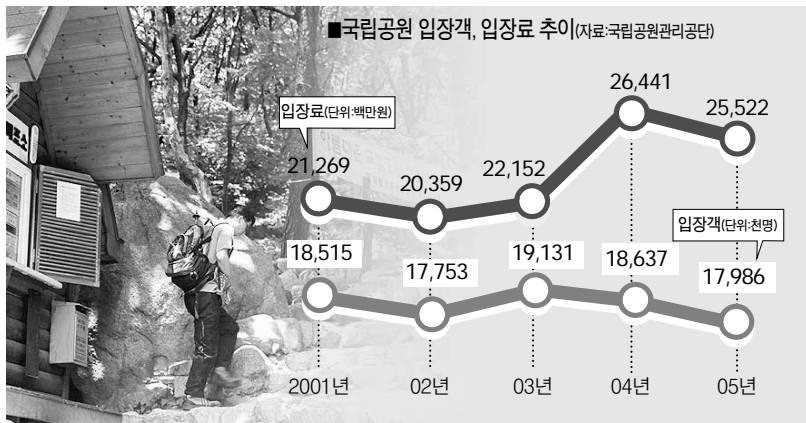
그러나 기획예산처 환경예산과 장대현 사무관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것을 폐지한다면 정부에서 그 돈을 충당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 세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실무자들도 "폐지는 대세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 분담금 조정 등 대책 마련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조계종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조계종은 국립공원 사찰의 수입이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30%



1월 18일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관람료사찰 전체 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격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철주 기자



는 단순한 산술 추정치"라며 "실제로는 30%를 훨씬 웃도는 금액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 수입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계종 전체 예산 중 20%에 이르는 관람료 사찰의 분담금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종단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2006년 예산의 경우 전체 172억여원 중 관람료 사찰 분담금이 34억3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부가 신중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재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연간 300억원 인력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수입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8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토지에 대해 사찰이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적지 않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막대한 예산 문제로 정부가 선택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징수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 정부의 문화재 보수비 지원, 국립공원 내 관람료 사찰의 종단 분담금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가 국고 보조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 가깝다.

국립공원 내 관람료 사찰의 종단 분담금 규모 축소도 조계종 재정 구조의 '핵심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듯 볼 때 1월 18일 열린 조계종 관람료사찰 전체회의에서 지관 스님이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관 스님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총무원에는 이에 대한 연락이 없었다"면서도 "철저한 준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특히 "스님들이 좀 더 허리를 졸라매 검소하게 생활하는 기풍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원 사무총장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들의 대부분이 관람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종단 차원에서 자립적 사찰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한명우·노병철·유철주 기자

전문가들 "국립공원, 국민휴양지 자리매김"

국민시설에 '이용자 부담원칙' 적용 무리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도 부정적 여론 예상

"사찰운영에도 '경영 합리화' 도입을"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2006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 동방대학원대학교

특별 과정	서화예술 분야	역경명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화전체 전문인 과정 명리학 최고 지도자 과정 풍수 최고위 과정 타로카드 전문가 특별과정 전문해석 전문가 특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채묵화 전 각 한문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방과 사주학 주역원전 실전사주명리학 육임학 관상학 복서육효학 국제 파동생명학 사주내정법 자미두수학
	불교예술분야	생활건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기초교리 사찰기초의식 불교무용 불교전통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전스포츠포마사지 실전교정기법 실전테이핑요법 실전치유기공 검 도
	풍수 분야	전통문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풍수와 인테리어 풍수지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민요 실기

◆ 접수기간: 2006.1.2~2.28 ◆ 개 강: 2006. 3. 6 (16주) ◆ 홈페이지 www.dongbang.ac.kr
 ◆ 문의전화: 02)745-214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전화 접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2006년 전기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 · 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연구분야	학위과정	수업연한	모집정원	모집학과	연구분야	학위과정	수업연한	모집정원
서화문예학과	서화예술학 고미술사학 문예심미학 웃칠조형학	석사과정	2년	00명	자연치유학과	약성본초학 치유경락학 심리치료학 체력기공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불교문예학과	대승경전학 불교예술학 불교의례학 불교경영학	석사과정	2년	00명	미래예측학과	천문역경학 풍수지리학 신과명리학 예측상담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민간민속학과	전통민속학 민간민속학 민속연희학 전통올려학	석사과정	2년	00명	요가명상학과	유가요가학 간화명상학 위빠사나학 도가명상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www.dongbang.ac.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대표전화 02-745-2141